

경북도, 사회복지회관+노인회관 건립

도청신도시 보훈회관 맞은편
3층 규모, 2027년 완공 예정
도내 복지단체 42곳 새 동지
'복지 허브' 시너지 효과 기대

경상북도가 사회복지단체와 노인회의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2027년까지 경상북도사회복지회관을 짓는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사회복지회관 등 건립' 건축기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총 사업비 355억원을 들여 대지 면적 1만1천855㎡, 건축 연면적 5천800㎡, 지상 3층 규모로 경상북도 보훈회관 맞은편에 건립 예정이다. 2027년 완공 목표다.

1~2층은 노인회관으로, 3층은 사회복지회관으로 각각 구획한다. 건물 별동에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받아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물품 보관창고 '푸드뱅크'도 설치한다.

이는 앞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중간보고, 도사회복지협의회·대한노인회경북연합회·도장애인단체협의회 등 각 직능단체가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도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단체의 사무공간을 제공하려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계획해 왔다.



경북도는 지난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사회복지회관 등 건립' 건축기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서 오는 2027년까지 경상북도사회복지회관에 경상북도 노인회관을 통합한 복합 건축물을 짓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경상북도사회복지회관 조감도.

경북도 제공

그간 경북 42개 사회복지단체(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는 마땅한 사무공간이 없어 민간 상가 건물 등을 빌려 활동하느라 경북도로부터 지원받는 연간 활동비 상당 부분을 임차료로 지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도 수요조사에서 도내 25개 단체가 '사회복지회관을 지으면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광역단체 등이 사무공간을 제공해 비용 부담을 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논의만 되던 노인회관을 통합 건립하면 경제적이며 두 시설 간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북도 노인회관은 2016년 경북도와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경북노인회) 협의에 따라 안동시 노인회관에 통합해 짓고자 경북도·안동시 예산을 편성했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두 기관의 분할등기와 공유재산 취득은 불가'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암초에 부딪혔다.

이후 경북노인회가 '대안으로 도청신도시에 노인회관을 지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계획을 조정했으나 이후 사업이 멈췄다. 그러다 지난해 4월 도 노인회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함

께 사회복지회관 통합건립 계획이 나오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도는 입주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노인회관 영역, 사회복지회관 영역, 공동이용시설 영역 등을 구획할 방침이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복지 허브 기능을 담당할 사회복지회관과 노인회관을 통합 건립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도민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도시도 활성화하고자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현 기자 hjh@maeil.com